

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,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

- 주택공급 확대방안(8.8.) 후속조치로 실시하여 가격담합, 허위신고 등 적발
- 4차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,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
-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착수하여 연말까지 실시 예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「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」(8.8.)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(8.13.~9.27.) 실시한 '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,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.
- 또한,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'미등기 거래'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'직거래'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.
- 아울러,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.

관계부처·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

-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), 국세청, 지자체, 한국부동산원,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·용산·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,
-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.
- 조사 결과 편법증여, 대출자금 유용,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(위법의심 행위 498건*)를 적발하였다.

*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

< 1차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 결과 >

위법의심 행위	건수	관계기관
합 계	498	
편법증여, 법인자금 유용 등	315	국세청
계약일 거짓신고 등	129	관할 지자체
대출규정 위반, 대출용도 외 유용 등	52	금융위·행안부
중개수수료 초과 수수	2	경찰청

○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.(붙임자료 1 참고)

- (사례 1)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,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
- (사례 2) 공인중개사 A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000부동산(인터넷 포털)에 표시·광고 매물 등록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한 후에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7차례 반복함. 중개대상물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표시·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지자체 통보 대상
- (사례 3) 매수인 A·B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감정평가(평가금액 22억원)를 받았음. 해당 아파트의 LTV 한도(규제 지역 50%)는 11억원임에 따라 선순위 임차보증금(8.5억원)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(5억원)이 불가함을 우려하여, 매수인들은 대출 전부터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(매수인의 부친)을 주소지에서 전출 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하여 대출규정 위반으로 의심되어 금융위 통보 대상. 또한 매수인은 주택가격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거래 신고법 위반 및 탈세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 대상
- (사례 4) 매수인은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.5억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조서를 작성.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 통보 대상

- (사례 5) 매수인은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하면서 ①모친에게 차입(14억원), ②증여받은 자금(5.5억원), ③주택담보대출(3.5억원)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함.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하여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 대상. 또한 법정 신고기한(30일)을 넘겨 지연 신고하여 지자체 통보 대상

-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, 금융위원회, 행정안전부,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,
 - 또한,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.
 -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실시하고, 금년도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'25년 4월 까지 지속 추진한다.

미등기 아파트 거래 및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

-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.7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, 미등기 거래*는 총 518건(전체 거래의 0.28%)으로 '22년 하반기 대비 약 56% 감소하였다.

* ('22.上) 2,597건, 1.57% → ('22.下) 1,183건, 1.26% → ('23.上) 995건, 0.52% → ('23.下) 518건, 0.28%

- 이는 '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'23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'실거래가 공개 시스템'을 통해 등기여부(등기일)를 공개하고 있고, 올해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*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.

* '24.2.13일부터 아파트 '등(棟)'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

-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(시·군·구)에 통보하여 허위신고,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, '24년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하여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'23년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,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 (위법의심 행위 209건*)를 적발하여 국세청,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.

*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

< 아파트 직거래 조사 조치결과 >

관계기관	통보건수	주요 위법의심 유형	처벌
국세청	59건	• 편법증여 • 법인자금유용 등	탈세 분석, 미납세금 추징
관할 지자체	133건	• 계약일 거짓신고 • 업·다운계약 등	취득가액의 10% 이하 과태료
금융위 행안부	11건	• 대출규정 위반 • 대출용도 외 유용 등	대출 분석, 회수 및 대출제한
경찰청	6건	• 명의신탁 •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• 불법전매 등	5년 이하 징역/2억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/ 3천만원 이하 벌금

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착수

-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한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.
-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하여, '20년 1월부터 '24년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중 ①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, ②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, ③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하며
- 「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」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 ('24.3.~6.)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·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하여 집중 조사한다.

- 또한,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'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'24년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① 차입금 과다 거래, ② 다수 지역 거래, ③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.
-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.

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차단

-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“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·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”이라며,
- “관계부처·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,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	책임자	단 장	김성호 (044-201-3589)
		담당자	팀 장	백선영 (044-201-3606)
			사무관	이석유 (044-201-3590)
			주무관	진준호 (044-201-3607)
			전문위원	전중훈 (044-201-3593)
유관 부서	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	책임자	팀 장	임형준 (02-2100-1690)
		담당자	사무관	이은진 (02-2100-1692)
	국세청 부동산납세과	책임자	과 장	김영상 (044-204-3401)
		담당자	팀 장	양창호 (044-201-3417)
	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계문 (02-2133-4660)
		담당자	팀 장	지미종 (02-2133-4662)
	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	책임자	처 장	윤종돈 (053-663-8760)
		담당자	부 장	김흥규 (053-663-8610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담당자	부 장	이무성 (053-663-8550)
		담당자	국 장	정우현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안신원 (02-3145-8040)

별첨 1

현재 추진 중인 기획조사, 현장점검 개요

<p>①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</p>	<p>(조사대상) '24년 수도권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 (추진현황) 45개 단지 현장점검(1차) 및 기획조사를 통해 총 397건의 위법의심 거래 적발 (향후계획) 2·3차 현장점검*(~'24.12.) 및 기획조사(~'25.4.) 실시 * 2차 점검(1기 신도시·인근 지역 및 서울 전체 지역, ~11.15.) 3차 점검(기타 경기·인천 및 이상거래 집중 지역, ~12.27.)</p>
<p>② 미등기 아파트 거래 정기조사 결과</p>	<p>(조사대상) '23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(추진현황) '23년 하반기 신고분 조사를 통해, 518건 미등기 거래 적발 * '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반기별로 지속 실시 중 (향후계획) '24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미등기 조사(~'24.12.)</p>
<p>③ 아파트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</p>	<p>(조사대상) '23년 아파트 거래 중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 (추진현황) '23년 신고분 조사(4차)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 * '22년부터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 (향후계획) '24년 아파트 직거래 조사(~'25.上)</p>
<p>④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계획</p>	<p>(조사대상) '20.1.~'24.7. 신고된 토지 거래 중 기획부동산 의심거래,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, 서울·하남시 GB 투기의심 거래 (추진계획) 연말까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('25.上)</p>
<p>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계획</p>	<p>(조사대상) '24년 7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분 중 차입금 과다, 다수 지역, 단기 보유 거래 등 (추진계획) 연말까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('25.上) * '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매년 실시 중</p>

별첨 2

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(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)

사례1
[서울 송파] **집값 담합 의심(지자체 추가 조사 요청)**

특정지역 및 단지 SNS 오픈채팅방 멤버

“우리 아파트 00평형은 00억원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”

“00억원 이하로 매물등록한 00중개사에 단체로 향의합시다”

집값 담합
안내문,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행위
공인중개사법 위반
지자체 추가조사 요청

사례2
[서울 강남] **중개대상물의 표시·광고 규정 위반(지자체 통보)**

표시·광고에 대한 규정 위반 지자체 통보

① 매물등록 (24.5.3)

매도인 매수인

② 거래완료 매물삭제 (24.5.3)

③ 삭제 후 당일 매물 재등록 (24.5.3)

④ 거래신고 전 매물 재삭제 (24.5.13)

⑤ 거래신고 (24.5.17)

거래완료 된 물건을 즉시 삭제하지 않고 거래신고 전까지 표시·광고

사례3
[서울 강남] **투기과열지구 LTV 한도초과 및 가격 거짓신고 (금융위, 국세청, 지자체 통보)**

공동 매수인 (부부)

주담대+임차보증금 합계 LTV 한도초과
* 주담대 대출 전 임차인(父) 전출시킨 후 다시 전입하게 하였음

감정평가 금액 : 22억원 (LTV한도 : 11억원)

<자금조달계획서>
주택담보대출 5억원
임차보증금 8.5억원 등

<위법의심 내용>
주담대+전세보증금 합계 13.5억원
LTV 한도초과 금융위 통보
가격 거짓신고 국세청, 지자체 통보

서울 APT

사례4
[서울 광진]

자금조달계획서 허위작성 의심(지자체 통보)



① 서울 비규제지역
아파트 매수
(21.5억원)



② 거래신고 및
자금조달계획서 제출
(증빙자료 제출의무X)



매수인

"21.5억 전액
금융기관
예금액으로
조달예정"

③ 실거래
조사 실시

④ 조사과정에서 실제
조달내역 제출요청,
자료제출에 불응

⑤ 거래신고법 위반 **지자체 통보**
탈세의심 **국세청 통보**

사례5
[서울 용산]

지연신고 및 편법증여 의심(지자체·국세청 통보)



APT

서울 규제지역 아파트 거래금액 약21억원에 매수

* 법정신고기한(30일) 초과하여 **지연신고**

<자금조달내역>

- 모친에게 차입 14 억원
- 증여(母→매수인) 5.5억원
- 주택담보대출 3.5억원

<위법의심행위>

- ① 차입금 형태의 **편법증여 의심** 및
- ② **지연 신고**로
국세청·지자체 통보



매수인